

한국과 일본의 독도홍보 현황에 대한 고찰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및 독도종합연구소장)

1. 아베정권의 독도정책을 통한 홍보전략

2012년 12월 아베내각이 들어선 이후 일본정부는 독도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아베정권 하에서 일본의 독도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 시점(2014.11.02.)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베총재의 ‘다케시마의 날’ 정부행사 승격공약과 그 실천

아베신조가 총리가 되기 한 달쯤 전인 2012년11월21일 자민당 총재자격으로 그는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차원에서 시마네 현이 조례로 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정부행사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¹⁾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음날 11월22일 일본 자민당의 ‘극우 공약’ 발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베 총재가 예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아베 총재가 총리가 된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²⁾

아베총재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강조한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 국내용 홍보로 볼 수 있다. 그 후 아베신조는 2012년12월26일 일본총리로 임명되었다. 이에 앞서 12월19일 한국에서는 박근혜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제18대 한국대통령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2013년2월22일 양국 새 정상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2월25일이 박근혜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므로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격상시키기를 보류한다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아베내각이 22일 행사에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킴으로써 사실상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격상시켰다.³⁾

그뿐만이 아니라 아베내각은 2013년 2월초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독도와 센카쿠열도, 북방4도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홍보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행사장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정부대표를 시마네현에 파견한 조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100% 일본 영토인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베내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각료가 아닌 정무관을 파견한 것이라고 ‘베려’라는 얘기까지 꺼냈다.⁴⁾

1) <http://news1.kr/articles/?905429>, 뉴스1, 2012.11.22.

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12201070932032002>, 문화일보, 2012, 11.22.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22107555&code=990101, 경향신문, 2013. 2.22.

4) 앞의 신문기사.

이런 아베정권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태도는 2014년 2월22일에도 변함이 없었다. 아베정권이 22일 시마네현 주최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2년 연속 중앙 정부 차관급 인사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⁵⁾ 사실상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로 정착시켰다. 이런 아베정권의 독도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이용되고 있다.

2) 아베정권이 실시한 독도 여론조사

일본정부 내각부 산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2013년 6월20일부터 11일간 성인 3000명(응답 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8월 1일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주도한 독도에 관한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케시마(竹島=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다. 독도를 안다고 답한 사람에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표시하도록 했더니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島根)현에 속한다’가 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내각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이 71%에 이르렀다.⁶⁾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대비되는 일본 정부의 ‘떠들썩’ 독도 정책이 일본 국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⁷⁾ 바로 이런 아베정권의 독도시책이 그대로 홍보역할을 해 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8월 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또 후나코시 다케히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야마모토 다이치 내각부 특명담당상은 “60%이면 안 된다.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침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발언하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홍보강화를 언급했다.⁸⁾ 이런 여론조사와 그 결과 발표, 그리고 더욱 독도홍보를 강화한다는 언급으로 이어진 아베정권의 독도시책은 정부주도라는 면에서 일본 측 독도영유권에 대한 홍보효과가 컸다.

3) 독도·다케시마 YouTube를 통한 한일 간 홍보경쟁

2013년10월16일 아베정권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다 퍼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삭제하라’는 논평을 내고 강력 항의했다.⁹⁾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일본어 제목으로 1분 27초짜리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TXg-NGVKuWI>)을 10월16일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은 일본 측에 유리한 문서만을 증거처럼 보여주며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은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

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63908, SBS, 2014.2.2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64518>, 매경뉴스, 2013.8.2.

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28931&cp=nv>, 국민일보, 2013.8.2.

8) 산케이신문. 2013.8.2. 원문 :山本一太領土問題担当相は2日の記者会見で、内閣府が発表した島根県・竹島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で「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答えた人が60.7%だったことに関し「6割ではいけない。領土主権に関する問題意識が十分に浸透していないことが判明した」と述べ、啓発活動に努める考えを示した。

9) <http://news.donga.com/3/all/20131024/58421398/1>, 동아일보, 2013.10.24.

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강조했고 1951년 패전국 일본이 전승국들로 구성된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에 독도가 들어 있지 않았던 점등을 부각시켰다.¹⁰⁾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한국 정부의 유감과 항의를 담은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23일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인터넷과 동영상에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¹¹⁾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이와 같이 독도 동영상을 선보이기 전에 12분23초 분량의 한국의 독도 동영상을 이미 공개해 있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외교부가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외주제작사에 의뢰해 제작한 독도 홍보 동영상에서 일본 NHK방송 화면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 사실을 NHK로부터 통보받고서야 파악했으며 저작권 문제를 우려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동영상을 자진 삭제했다.

외교부는 10월27일 “12분23초 분량의 독도 동영상에서 NHK가 2011년 제작한 ‘언덕 위의 구름’ 드라마의 러일전쟁 장면이 10초가량 NHK의 허락 없이 사용된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월14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게재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수차례 사전검토를 했으나 내용에 집중하는 바람에 저작권 문제는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¹²⁾

결국 2013년10월14일 한국외교부가 12분23초 분량의 독도홍보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올렸고 그 이틀 후에 경쟁하듯이 일본정부가 1분27초 분량의 독도홍보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 측 동영상이 NHK TV드라마의 영상을 10초가량 도용했다는 NHK의 항의로 인해 자진 삭제되었고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다.

현재(2014.11.2. 시점)는 일본이 1분27초 분량의 독도동영상을 11개국어로 홍보하고 있고 한국은 새로 제작된 4분 분량의 독도동영상을 12개국어로 홍보하고 있다.¹³⁾

그런데 2014년 8월의 통계이지만 일본정부가 제작한 독도홍보동영상이 한국정부 제작 동영상보다 6배 가까이 많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실이 8월1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인 유튜브상에서 한국 정부의 영문판 독도 홍보 영상 조회 수는 3만6,619회(2014.2.22.게시), 일본 정부의 영문판 독도 홍보 동영상 조회 수는 20만9,018회(2013.10.31.게시)로 집계됐다. 일본 동영상의 조회 수가 한국 동영상 조회 수의 5.7배에 달해 게재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컸다.

더 큰 문제는 한·일 양국이 자국어와 상대 국어로 제작해 게시한 홍보 동영상 조회 수에서도 한국이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 동영상의 한국어본(2014.1.1.게시) 조회 수는 38만3,453회, 일본어본(2014.1.24.게시) 조회 수는 4만1,589회였고, 일본정부 동영상의 일본어본(2013.10.16. 게시)은 87만5,609회, 한국어본(2013.12.10.게시)은 7만2,484회였다.¹⁴⁾

심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를 놓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영문판 홍보 영상을 만들었

10) 앞의 신문기사.

11) 앞의 신문기사.

12) <http://news.donga.com/3/all/20131028/58499209/1>, 동아일보, 2013.12.28.

13) http://www.ytn.co.kr/_ln/0101_201410241405430337, YTN, 2014.10.24.

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942.html?OutUrl=naver>, 세계일보, 2014.8.19.

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회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이버 홍보전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¹⁵⁾ 일본 측의 독도동영상에 대한 조회 수가 한국 측 동영상 조회 수보다 6배나 많다는 조사결과의 원인으로 동영상 시간이 일본 측이 1분27초로 4분가량이 되는 한국 측 동영상보다 훨씬 짧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도문제와 같은 까다로운 동영상은 요령 있고 짧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보겠다는 의욕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4) 일본의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을 통한 독도영유권 홍보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정부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술이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사회과 교과서를 많이 통과시켰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해 있다” 등 악의적인 표현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매년 일본정부가 출간하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해 독도영유주장을 강화해 가고 있다. 국가의 중요문서를 통한 홍보로 풀이된다.

5) 아베신조의 목표-독도 ICJ 단독 제소 발언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30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도 ICJ 단독 제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미국의 만류로 접은 바 있다.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아베 총리가 1년 반 만에 또다시 단독 제소 방안을 거론한 건 양국은 물론 미국까지 가세해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일시에 무너뜨리려는 것과 다름없다.¹⁶⁾

아베정권은 이런 식으로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ICJ 행을 거론함으로써 마치 ICJ에서의 재판이 정당하데 한국이 억지로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본 국민에게 심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아베정권의 독도홍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정부의 독도홍보정책의 한계

한국은 일본의 독도홍보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독도홍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일본 측 도발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 독도홍보용 동영상을 선보였고 대내적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중심이 되어 대국민 독도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¹⁷⁾

그런데 한국정부의 독도홍보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독도외교에 있어서의 조용한 외교와 단호한 외교의 구별이 애매모호하여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선언해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에 불러 고작 항의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항의수준이므로 실제로 일본의 독도도발을 막을 길이 없다는 현실이다.¹⁸⁾

한국의 독도홍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은 독도동영상 조회 수로 일본 측에 완패한 상황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15) 앞의 신문기사.

16)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2919>, 중앙 선데이, 2014.2.2.

1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2901070327060002>, 문화일보, 2014.1.29.

18)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405>, 천비일보, 2014.8.5.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측이 외교적 논쟁을 무서워한 나머지 일본 측이 제기한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국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할 뿐, 논리적으로 정확히 비판하지 못한다는 점을 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독도동영상은, 1951년 8월 미국무성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러스크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냄으로 독도는 최종적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⁹⁾ 그런데 한국 측 독도동영상은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에 명령한 SCAPIN 제 677호에 독도가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독도는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일본은 1946년의 SCAPIN 제677호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문결정과정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고 1951년 8월 ‘러스크 서한’을 통해 독도는 최종적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²¹⁾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상하게도 일본 측의 가장 강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런 한국 측 홍보자세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 가장 강력한 주장, 즉 ‘러스크 서한’으로 독도는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내용을 극복 못한다고 믿고 공세를 계속해 오고 있다.

‘러스크 서한’ 자체는 미국만의 견해이므로 연합국 합의를 원칙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는 미국의 비밀문서 등이 많이 수집되어 있는 상태²²⁾로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극복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러스크 서한’을 거론할 경우 예상되는 미국과의 마찰과 한국국민의 반미감정 상승 등을 무서워하며 일본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일본의 가장 강력한 주장에 대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홍보를 강화하더라도 그것은 싸우라고 큰 소리 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총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홍보를 강화하더라도 항상 한계가 따라다닌다. 한국정부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일본 측 ‘러스크 서한’을 이용한 독도영유권 주장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독도홍보 효과가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최대의 무기로 제시하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 침묵함으로 인해 한국의 독도홍보가 결국 헛되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해마다 일본에게 독도홍보가 밀려 결국 독도문제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국제적 인식이 고조되거나 독도 앞바다나 독도에서의 무력충돌이라는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단호한 자세의 배후에는 일본 측 주장을 모두 완벽히 극복했다는 단단한 정신적 자신감이 필요하다. 애매모호하고 안이한 태도를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19)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동영상.

20) <http://dokdo.mofa.go.kr/kor/>, 한국 외교부 독도동영상.

21)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sfjoyaku.html, 일본 외무성,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다케시마에 관한 취급’.

22) Yuji Hosaka, ‘Is the so-called Rusk Letter be a Critical Evidence of Japan’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sland?’,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 7, No.1, 2014.4.